

10월8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6625.93 (-177.97)	892.27 (-6.16)	3.983 (+0.022)	1343.75 (+0.95)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력 수요 AI 등 K-첨단산업 미래 흔든다

⚡ 대체불가 K-에너지 ① 메가프로젝트 시대

반도체 산단 등 전력수요 급증
정부,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착수
발전설비 확충·송전망 구축 등 과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2040년까지 향후 15년간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했다.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대체불가 K-에너지 구축’ 프로젝트의 쟁점과 정책방향, 산업계 동향 등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전남 광주 공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팹(FAB) 4기와 협력기업이 모두 가동되면 이곳에서만 최대 전력수요 6.3GW(기가와트)가 필요하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6기가 24시간 돌아야 가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kV 송전망에서 산업단지까지 약 20~25km 구간에 공급선로를 새로 놓아 2029년까지 1단계로 3GW를 확보하고, 2단계로 누적 6GW 이상까지 공급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9일 전남광주 서구 벽진동 주변 광주군공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를 방문했다. /뉴시스

웠다. 문제는 이 숫자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3대 분야에 민관 합동 1400조원을 쏟겠다고 밝혔다. 용인·평택 클러스터의 수도권 메모리 생산능력을 5년 안에 두 배로 키우고, 서남권에는 800조원 규모의 제2 반도체 생산거점, 충청권엔 HBM 첨단 패키징 거점, 영남권엔 전력반도체 거점을 각각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AI데이터센터발 전력수요까지 겹친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3년 뒤 1.5GW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10~25MW 수준을 썼다면 AI데이터센터는 100MW가 넘는 전

력을 상시로 요구한다. 전력망 입장에서 ‘간헐적 대형 수요’가 아니라 ‘상시적 초대형 수요’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사실상 원전에서 재검토 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내 전력수요가 급증해서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 4월 2040년 최대전력수요를 131.8~138.2GW로 1차 전망했다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인 8월 재전망에서 이를 158.4GW(기존 시나리오)~165GW(상향 시나리오)로 상향 조정했다. 4개월 새 추가된 수요는 약 27GW로, 원전 19기에 맞먹는 규모다.

〈2면에서 계속〉
/세종·한울수 기자
h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 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 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고소득층 가구, 번 돈 절반 가까이 남긴다

보건사회연구원 소득·채감분배 연구하위 20%, 소득 지출 후 5% 미만 남다

소득 기준 상위 20%는 벌어들인 돈을 소비·공과금 등에 지출하고도 절반 가까이 남겼다. 반면 소득하위 20%의 경우 지출 후 남는 금액이 소득의 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빈부격차 해소가 난항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소득분배와 채감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소득하위 20% 가구는 경상소득(근로·사업소득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95.6%를 소비 지출 및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장보험료 등)로 소진했다. 지출 뒤 남은 흑자액은 소득의 4.4%에 그쳤다.

이에 반해, 소득상위 20% 가구는 경상소득의 53.2%를 지출하고 46.8%를 남겼다. 소득 자체도 많지만 소득 가운데 저축·투자 등에 쓸 수 있는 비중도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컸다.

이러한 격차는 자산 축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낳는다.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더라도 투자·저축을 위한 절대치가 하위 가구의 여력에 크게 앞선다.

보유한 자산의 시세 변동폭 역시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불평등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부동산을 자산 불평등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단순한 보유가 아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했는지가 자산 격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늘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서로 상승을 강화하는 흐름도 확인했다.

주식 역시 보유 여부 및 투자 규모에 따라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이 각기 다르다. 소득과 자산의 분배는 장기적으로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KDI는 소득 하위 75%의 소득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자산은 상위 25%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커버스토리

쏟아지는 주택공급계획… 실입주는 하세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산 등 서울 10개 자치구 후보지 발표 2030년 착공 목표… 실입주 수년 전망

정부가 서울 도심에 약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공사는 4년 뒤야나 시작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대폭 줄이고 미착공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지만 신규 후보지 지정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해진다. 공급계획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을 자가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

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서울 10개 자치구 11곳, 총 1만7881가구다. 양천구 염창역 남측 4222가구, 용산구 효창공원 앞역 북측 4040가구, 강서구 화곡역 동측 2335가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2030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6~7년 기다려야 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약 4년, 준공까지는 추가로 수년이 걸리는 구조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주민 동의와 보상,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실제 지난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현재 전국 47곳에서 약 8만5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첫 착공은 올해 말 예정된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다. 제도 도입 이후 첫 사업이 착공하기까지 약 5년이 걸린 셈이다.

공급계획과 실제 입주 물량 사이의 간극은 최근 주택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4% 증가했고 착공도 2만679가구로 41.1% 늘었다. 반면 준공은 2만5630가구로 19.1% 감소했다.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실제 완공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3면에서 계속〉

/이현진 기자 hj@



메트로 한줄뉴스

▲李대통령, 故박원순 악성댓글 일화 전하며 “방치하면 댓글창, 쓰레기장 돼”
▲靑 “이 대통령, 어제 태릉골프장 찾아… 현장서 대구 사고 보고 받고 총력 대응 지시”

▲윤호중 “임은정, 중수청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 감찰 지시”
▲‘개청 70주년’ 서울교육청…특별전·포럼·특강 등 개최



▲‘계곡살인’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수령…환수액은 ‘0원’
▲수명 늘었지만… 일터 나가는 80대 절반 “노후 준비 전혀 못해”

/사진 뉴시스